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011('22-1) | 22.01.03.

—————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유혹과 함정
김기호

—————
팬데믹 시대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나태종

—————
한반도 '종전선언'과 우리의 안보
박용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의 유혹과 함정

김 기 호

(KC대 국제관계학 교수)

(둘하나연구소장)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지구촌의 기상은 맑음과 햇빛이 아니다. 새해 아침에도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잠겨 엄동설한으로 변하고 있다. 중동, 우크라이나, 대만에서는 이슬람극단주의와 민족주의의 안보 덩어름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는 훈풍을 가장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유혹이 폭풍의 함정을 덮으려 한다.

임기 말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와 맞물려 중국의 지원 하에 세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는 달콤한 유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 최후의 보루인 향군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유혹과 함정'을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간략한 이론적 고찰과 역사적 교훈 및 북한의 행태를 중심으로 이를 접근해 본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선전포고로 개시되고 평화(강화)조약 및 협정으로 종결된다. 종종 평화협정 전 단계로 임시적인 조치로 종전선언이 이용되기도 한다.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종식했음을 알리는 전쟁 당사국 최고지도자간의 법적 또는 정치적 선언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전쟁 종결에 있어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럽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럽에서의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것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연합군 간의 2차 세계대전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통해 종료되었다. 이처럼 전쟁의 종결은 법적으로 완결성을 지닌 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와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언제나 전쟁이나 멸망으로 귀결되었다. 뮌헨신드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챔벌린과 히틀러간의 뮌헨협정(1938년)은 히틀러에게 유럽 전역이 뻗히게 되는 시간만 벌어줬다. 미국과 남북베트남간의 파리 평화협정(1973년)은 체결 2년 만에 자유베트남이 붕괴되고 베트남의 공산화로 귀결되었다. 미국과 탈레반과 체결된 도하협정은 우리가 생생하게 본 것처럼 20년간 쏟아 부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휴지로 전락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탈레반 수중에 떨어지게 했다.

하물며 상대가 모든 선언과 협정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파기를 습관처럼 반복하는 북한인지라. 북한은 정전협정, 북방한계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도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심지어 우리에게 2018년 4월, 남북지도자의 판문점 도보다리의 연인 같은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남측지도자는 현재 ‘삶은 소대가리’로 비하되었다.

작금의 국제체제는 미중갈등이 증폭되는 신 냉전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전선은 무역, 경제, 안보전선에서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로 확장되고 있다. 점증하는 미중갈등 구도에서 한국의 무리한 종전선언 추진은 중국의 영향력만 커지게 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전략환경만 조성하게 된다.

현재 남북한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잠시 전투를 정지한 상태인 ‘정전’의 상황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돼 있다. 정전협정은 6·25 전쟁 후 70년간 한반도 평화를 유지시키는 주요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책략에 이용되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김일성 시대 이래로 줄곧 주장해 온 평화협정의 파생상품 함정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평화협정 문구에 포함될 영토경계 획정 문제, 전쟁 책임

문제, 포로문제, 전후체제 문제 논의를 묻어둔 채 밀어붙일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소원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6·25전쟁의 국제법적 종식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NLL 폐지 등을 압박해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 중 최대의 위기는 NLL 폐기로 인한 서해의 해상경계선이 유엔 해양법의 등거리 원칙에 따라 새롭게 설정되어 인천 앞까지 남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종도 국제공항을 비롯한 인천 등 수도권 서측방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되며, 서해 5도도 북한 영해 깊숙이 위치한 고립된 섬이 된다. 더구나 67~116개 (2020년 말 기준)의 핵무기를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는 한 정권의 과업이 될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대전략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교훈은 달콤하게 보이는 유혹인 평화주의자들의 이상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전쟁을 대비할 때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히틀러에게 <평화>라는 유혹의 의미가 유럽을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키는 함정이었듯이 김정은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임을 역사와 그들의 행태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새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팬데믹 시대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나 태 종

(충남대학교 교수연구원)

(항공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우리 민족의 위기 극복 DNA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필요성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유행성 독감 수준이어서 빠르게 수습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도 환자발생이 증가하고,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각급 학교에서의 비대면 수업과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시행될 때 만 해도 길면 1년, 짧으면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일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여 자유로운 일상으로 회복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코로나-19는 평범한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가정에서는 물론 직장 생활 등 소소한 일상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하루를 열어나가는 기대보다 무기력함과 지루함, 외로움이 더해지는 날들에 세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정서적 공감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에 굴하지 않고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 비록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일상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초유의 사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일상회복의 현실화에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와 태도 견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자 스티븐 코비(Stephen Richards Covey)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②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③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④ 승-승을 생각하라 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⑥ 시너지를 내라 ⑦ 끊임없이 쇄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끝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며,

소중한 것은 나중에 하고, 승-패를 먼저 생각하며, 먼저 이야기 하고 다음에 듣는 척을 하며, 협력하지 않고 혼자 다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갑부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은 “스스로 손해 보는 짓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고 강조하였으며, 매슬로우(Abraham Harold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설명 하면서 최고 수준의 욕구로 ‘자아실현’을 제시하였다.

자아실현이란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을 파악하고, 이를 함양하여 자아를 찾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이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면 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의 경주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잘 먹고, 또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별다른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거나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잘 하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면 우환이 발생할 수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환언하면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하게 또는 가볍게 취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환이 발생하는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중간목표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하거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 경주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자리매김 되었다. 즉,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핵심기술이 연결되고 융합되어 사회 전반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 추세를 직시하여 스스로 첨단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소양을 구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외부세계로만 향해 있던 자신의 시선과 발걸음을 내면으로 돌려 무언가 아쉽고 허전함이 남아 있는 자신의 ‘마음 자리’를 채워 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여행과 독서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날마다 접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 눈으로 보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귀로 듣는 소리와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의 특화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현실의 소재를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무한대로 키우되, 타인의 상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흥미와 반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글을 읽는 독자가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다섯째, 짧은 시간에 최고 수준의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정·보완하고 가다듬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2년 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방면에서 달라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인생을 반추하면서 튼실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학(글쓰기, 스토리텔링) 분야에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를 기대한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우리의 안보

박 용 환

(동국대학교 교수, 북한학 박사)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3년여 간의 전쟁을 치루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따라서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반도의 전쟁 상황은 아직 그 종지부를 찍지 못한 채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아마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시상황 국가라 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1953년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상태인 6·25전쟁을 남북한과 미국·중국 등 당사국들이 모여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10·4 남북공동선언’ 제4조에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8년 4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판문점선언’을 통해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이어 2021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한 번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처음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나쁘지 않다”고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전선언은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함으로써 군사위협을 감소시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즉 북한은 미군의 타격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남한은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안보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위협을 낮추는 안보이익을 얻는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전쟁 상황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전선언으로 북한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북한의 비핵화 경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논의가 오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남북교류의 재개로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타개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단 북한이 이러한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문에 반드시 북 핵 포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결코 장밋빛 희망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 할 수 있어 우려된다.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여 명의 주한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역할이 종전선언과 함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 군사충돌 위험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사도 자연스럽게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만약에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둔하게 된다면 북한은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에 급격한 변화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설령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에도 동북아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과 혈맹국인 중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패권다툼에 돌입한지 오래다. 인도·태평양전략, 쿼드(Quad), 오키우스(AUKUS) 등은 미중 패권다툼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구들이다. 미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미군 주둔을 선호하겠지만, 중국으로는 코앞에서 자신들을 견제하는 미군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성주의 미군 THAAD 배치 상황을 상기해 볼 때 중국은 종전선언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국민의 67.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종전선언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우리의 안보를 자칫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아직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그 속도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 측면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문제는 아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